



며 미래 세대에게는 사회복지 연금의 지불 보장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결국 기성세대는 사회복지의 승자가 되고, 우리의 자손들인 미래세대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패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던 더 나은 선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인구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지불해야 하는 돈들은 그들의 투자여부에 따라 더 많은 효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명목 하에 해당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들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국채수익률만도 못한, '연금 수익률'을 강요 받는다. 사회복지에 대한 명목으로 사용된 자금은 사회 전반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수십 년 동안 둔화시켜왔다.

사회복지가 만약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등한시하는 것은 문제를 확대시킬 뿐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향후 초래할 거대한 문제를 미래 우리의 자식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만들어 내는 여러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우리들이 빠르게 자각할수록,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상유지나 점진적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시급한 개선만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재무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social-securitys-winners-and-losers>